

월요광장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많다. 중국의 거센 추격에 최근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부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과거에는 제조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됐지만 이제는 제조 전 단계(연구개발, 제품 기획, 디자인 등)와 제조 후 단계(마케팅, 서비스 등)에서 훨씬 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제조 이전 및 이후 단계의 기능은 본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반면에 제조 기지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연구 개발이나 디자인·서비스 등이 제조보다 훨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조 분야의 경쟁력과 연구 개발이나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그 연결

제조업 트렌드 변화와 지역

의 포커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제조업이 떠나면 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제조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연구원, 디자이너, 컨설팅, 설계, 엔지니어 기술자 등도 할 일이 없어진다. 원재료 공급 업체도 제조 공장을 따라 이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이들 간의 지식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혁신이 멈추게 된다. 결국 제조업 경쟁력과 연결된 광범위한 고부가가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제조업이 개도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상품을 수입해야 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폭이 불어난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제조업은 성장할수록 근거지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된다. 강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 제조업의 육성과 성장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

독일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OECD 평균 15%)이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키워드는 세계 최대 수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강소기업 미텔스탄트(Mittel-

stand·중견기업)와 히든 챔피언이 즐비한 독일이 들고 나왔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 낮은 생산원가를 무기로 세계의 공장을 차지하며 제조 기반을 흡수한 점, 한국 등 후발 주자의 빠른 기술 추격으로 인해 선두 주자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10년 뒤를 준비하는 의지이고 선행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저임금 국가로 나갔던 선진국의 제조공장(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일부 선진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대세다.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제조하는 오프쇼어링은 기업 경영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유턴하고 있다. 중국에서 애플 제품을 생산하던 폭스콘이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 포드는 중국·멕시코 등에 있던 공장을 모두 미국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했다.

가전업체 월폴도 중국에 있던 믹서 생산 라인을 미국 오하이오 주 그린빌로 이전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제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볼스로이스와 폴크스바겐이 중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저임금 요소보다 미국의 비임금 요소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에는 인건비보다 제조 공장

이 위치한 곳의 노동생산성, 노동유연성, 고객접근성, 지자체 지원 사항, 현지 시장 트렌드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제조 강국이었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리쇼어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자동차·철강·화학 산업이 주춤하면서 성장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산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 온 큰 축이다. 자동화와 첨단화를 뛰어넘는 스마트화와 같은 미래 제조업으로의 방향 설정과 혁신에 있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열세는 더욱 심화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버릴지 모른다.

제조 기반은 해외로 이전되고 국내에서는 점차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그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기업의 혁신 의지와 중앙정부 지원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며 지역의 역할도 필요하다. 근시안적인 자세가 아닌 지역 내 제조업의 미래에 요구되는 지역 내 인력 양성, 노사 협력,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미래의 제조업 환경에서 혁신의 발원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조칼럼



류 봉 군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재판 도중에 제가 당사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할 때면 당사자들로부터, 특히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 “판사님이 알아서, 억울하지 않게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머쓱해지면서 앞의 말을 당사자들에게 합니다. 이를 들은 분들 중 일부는 저의 말에 공감하는 듯하지만, 일부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판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기타 소송이든 간에, ‘진실

진실 찾기

찾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맡고 있는 민사소송 재판(변론)절차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률요건’에 대입해 그에 맞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 판사와 당사자, 그리고 소송대리인들은 서류로 된 증거를 제출, 그 진위 여부와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제3자 위치에 있는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진실’을 찾기 위한 자료 수집의 일환이지요.

그런데 민사소송 절차에는 ‘증명책임’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바(더러 이를 ‘입증책임’이라고도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한 ‘입증’은 일본식 표현이므로 이를 ‘증명’으로 바꾸어 지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증명이 필요한 사실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그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증명책임’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일부 당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와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설사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증거로 정제해 제출하지 못한 결과 위 ‘증명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법원이 과거에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법원이 ‘진실 찾기’의 노력을 기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의 증거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만 듣고 그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진실’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

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원은 위 ‘진실’과 ‘사실’의 괴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법원이 당사자가 밝혀야 할 사항에 관해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행사하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보전’ 절차 등 분쟁이 발생한 직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1심 재판에서 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하여 가끔씩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의무로서 사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판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을 ‘모두 알아서’ 재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괴리를 좁히고자 저희 법원 구성원들도 더욱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께서도 법원에 이 같은 ‘고민’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 고



김 성 중
수필가

최근 몇 년 사이 기이한 단어들이 등장했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n포 세대. 한국을 살 곳이 못 된다는 의미로 지옥에 비유하고, 넘어설 수 없는 계급제가 존재하는 사회라 비꼬며, 기본적인 삶의 요소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회로 묘사하는 단어들이다. 뜻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함축해 놓은 것들이다.

어느 시대에나 사회에 대한 불만은 늘 존재했고, 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도 존재했다. 하지만 근래 등장한 저 단어들은 과거의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과거에 존재했던 불만은 그 기반에 어디까지나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앞서 언급된 말들의 기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

반에는 개선의지가 아닌 ‘포기’가 있다. 통신이 발달한 덕에 공감을 얻은 의견은 순식간에 사회 전반으로 번진다. 인터넷이 일상이 된 젊은 세대에게서 그 속도는 더욱 빠르다. 때문에 이 ‘포기의 사고’가 젊은 세대의 특성을 구성하는 공통된 의식으로 뿌리내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는 포기의 사고가 자기 비하로 나타난다. 정부의 부정이나 비리, 무능이 보도되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헬조선이지.’ 내지는 ‘저게 한국 국민의 종족 특성이다’ 라고 반응하는 식이다. 반복되지만 하는 똑같은 부조리를 보면서 결국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학습되어 버린 것일까. 마치 회사에서 수없이 기회를 주었으나 발전 의지도 가망도 없는 직원을 바라보는 듯한 쓸쓸함이 느껴지는 반응이다.

‘이민제’(奨)라는 것이 있다. 이민을 가기 위해 계를 조직해 돈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1년 전쯤 기사화되어 구체적인 존재가 알려졌고 얼마 전 다시 기사화되었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복유럽 정착 가이드북까지 출간되었다고 하니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모르겠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 전자, 해운 산업 등의 대기업 직원들로, 국내 임금 근로자 중 상위층에 속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유럽 선진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수의 대학 학위 소지자, 국내 명문 대학 공동된 의식으로 뿌리내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거 해외 취업 이민의 이유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였다. 살기 위해서 혹은 꿈을 위해서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이민계를 조직한 이들의 속내는 그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미 국내에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성취를 이뤘지만 긴 노동시간, 과도한 경쟁,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가 이민을 결정하게 만든 주요 인이다. 그들의 이민은 ‘더 나은 것의 추구’가 아니라, ‘한국 탈출’의 느낌이 강하게 든다.

국내의 유능한 인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해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 발전

에 이바지한다면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환멸을 한국을 떠나려는 동기로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 즉, 미래세대에게 번진 포기의 사고가 한국을 버리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평탄치 못했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을 지금까지 한국으로 남아 있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경제력, 군사력, 정치외교력. 이 중에는 납득할 만한 것이 없다. 절대로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 땅의 국민이 원천적인 힘이라는 주장에 보다 믿음이 간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말인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릴 것인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숙명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권력을 손에 쥐고 국가와 사회를 경영하고 있는 세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근본적이고 올바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노력을 의지하고, 취임한다고 돈을 주고, 중동 취업을 일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社 說

문학관 등 각종 사업 유치 광주·전남 공조를

광주시와 전남 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 태세여서 과열 조짐마저 보인다.

최근 관심거리는 450억 원 규모의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것과 맞물려 경합이 달아오르고 있다. 술한 작가를 배출한 광주시는 후보지 2곳을 선정해 오는 25일 문화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씨의 고향이기도 한 장흥군은 옛 장흥교도소를 부지로 확보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투자규모가 1000억 원이 넘어 막대한 부대효과가 예상되는 한국전쟁 연구개발(R&D) 센터를 놓고도 광주시와 나주시가 맞고 있다. 광주시가 한전 측에 부지 일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뜻을

한전에 전달하자 전남도가 나서 이에 필적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와 순천시는 청소년과 학생 대상 직업체험 교육센터인 500억 원 규모의 ‘호남권 캠퍼드’를 끌어오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북 주요 도시의 중심축이라는 논리를 퍼는데 반해 전남 동부권 최대 교육도시인 순천은 인근 영남 지역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이들 자치단체들이 이 모든 사업들을 순순히 양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출혈 경쟁으로 치달으면 민선 6기 출범부터 강조해 온 ‘상생 정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비와 외부 투자를 수혈받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지를 고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공조 또한 절실하다.

위기의 다문화 가정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전남 지역엔 다문화 가정이 유독 많은데 최근엔 이들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가운데 부부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4년 전남 지역 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536건으로 2013년 501건보다 35건(6.53%)이나 늘었다. 이는 전남 지역 전체 이혼 건수의 12.9%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 부부의 이혼 평균 연령은 38.0세(여성 기준)로, 한국인 부부 평균 43.4세보다 낮고 결혼생활 기간도 5년 미만 차(45.2%)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다문화 부부 2쌍 중 1쌍이 한국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뒤 결별한 셈이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늘어난 이유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분별한 소개로 처음부터 ‘질못된 만남’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언어·문

화·연령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이 언어 장벽과 차별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이탈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안정적인 것으로 성장하도록 사회적 지원의 지원 시스템 마련과 이웃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혼 뒤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거나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이 건강지 못하고 갈수록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차이 해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나 복지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無 等 鼓

1, 2차 세계대전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승전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봤다고 한다.

여성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졌다. 17~18세기 서유럽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싹트면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여성은 여전히 대상이 아니었다. 19세기까지도 여성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투표는 집안의 가

장의 역할을 떠맡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적 신분이 상승한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 중인 곳에서는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마저 맡게 돼, 사회도 여성의 권리를 인정치 않을 수 없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캐나다와 소비에트연방, 독일 등이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다. 영국은 1918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줬다가 1928년에는 여성과 남성의 투표권이 같아진다. 미국도 1920년에, 프

여성 혐오

랑스와 이탈리아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참정권을 인정한다. 중국도 일본의

침략과 내전을 거치면서 구명 난 남성의 자리를 여성이 대체하면서 참정권 획득으로 이어진다.

인류사적으로 여성은 불평등한 존재였으나 그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필연적인 역사적 작용으로 인해 남성과 평등한 존재임을 입증했다. 솔직히 남성의 별 도움 없이, 생리적으로 여성을 싫어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성을 차별하거나 부정하고, 공격하는 여성 혐오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태일 뿐이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투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